■ 복지부 노인 레스피트 플러스 프로그램 17일부터 시행

효도여행 이젠 마음 놓고 보내 드리세요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께 효도여행을 권하고 싶지만 정작 얄팍한 주머니 사정 때문에 선뜻 마음먹기도 쉽지 않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세태에서 부모님과 동반 여행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다. 그렇다고 부모님 홀로 여행을 떠나시도록 하는 것도 마음에 큰 짐이 되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 이런 사정 때문에 '마음은 굴뚝' 같지만 효도여행을 포기하는 자녀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부모님이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서 국내를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부터 '장애인·노인 레스피트 플러스 프로그램(Respite Plus Program)'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선도사업(Social Service Venture)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서비스 내용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 노인 등 취약계층, 신체적으로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지사업 가운 데 하나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올해 11월부터 오는 2010년 8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노인, 장애인과 그 가족 등 모두 8천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령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되 일정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여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경우 총 여행 경비의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특히 여행을 할 때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케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노인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총 여행경비가 25만원일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가 15만원, 사업자가 7만5천원을 지원하고 이용자 본인이 2만5천원을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저렴하다.

여행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의 경우 (주)CTL네트웍스 고객센터(1577-2558) 혹은 홈페이지(www.rplus-tour.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rtour@ectl.net)이나 팩스(02-3153-2599)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장애인·노인 Respite Plus Program'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장애인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경제난 때문에 효도여행을 포기하는 자녀들이 많지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 프로그램 등이 있는 만큼 실속있는 여행을 위해서는 여행 상품 관련 정보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간호사·복지사 동반 '전문 케어 서비스'

총 경비의 10%만 부담…안전 여행 가능

여기에다 국내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여행 인프라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장애인 등 여행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화장실,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여행 목적지의 편의시설 및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이경수 사회서비스 기반과장은 "현재는 휠체어가 필요한 노인·장애인과 함께 가족들이 여행하려면 교통, 숙박 등에 장애가 많아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등의 여행서비스 시장이 형성되고, 업계 스스로가 인프라를 갖추도록 노력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스피트 플러스 프로그램(Respite Plus Program)=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등으로 여행에 나서지 못하는 장애인 · 노인 가정을 위해 특화된 전문관광상품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 인력이 동반하기 때문에 여행하는 노인·장애인이 신체적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취업과 연계되도록 운영해야"

조 준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 문화·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기관, 사회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참여형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준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영암문화원에서 열린 '제20회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엄'에서 '고령사회에 있어서의 올바른 문화복지 증진방안'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노인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에서 진행될 수 밖에 없으며, 노인이 거주하는 삶의 공간도 결국 지방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체계적인 노인 문화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문화기관(문화원, 문화의 집,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 공·사설 기관이 협력체계 구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들이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고 대상 노인들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층 내실있게 운영돼야 한다"며 "현재 취업이 이뤄지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한층 심화하는 한편, 교육 이수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노인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등 가족단위 참가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인과 자녀들이 가정에서 문화를 매개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실버 라운지

권성옥

황혼 자살 〈상〉

빈곤·소외감 벗어나는 사회적 관심 필요

방송을 통해 독거노인과 병마에 시달리던 노인이 자살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가끔 접한다.

그때마다 '노인이 죽고 싶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말과 더불어 황혼기에 놓인 노인이 무엇 때문에 인생을 서둘러 마감하는 것일까라는 다소 역설적인 질문을 해본다.

우리사회는 '자살이 노년층과 깊은 연관이 없다'는 통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노인 자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다. 이는 노인에 대한 또다른 차별적 인식을 보여주는 한편, 노인 자살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으로 은폐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통계상으로 지난 2002년~2006년까지 60세 이상 노년층 자살이 국내 자살자 전체의 30.3%(2만108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그 동안 자살 최다 노출 연령층이라고 여겨졌던 41세~50세 중년 남성들의 자살율(23.8%, 15,809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노인자살은 각종 요인(퇴직, 건강 약화, 만성질환, 사회관계 범위의 축소, 배우자의 상실, 경제적 불안정, 가족불화, 우울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무기력·절망감에 빠져들고,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게 정설이다.

노인 자살의 원인으로는 첫째, 신체적 측면에서의 상실이 자리하고 있다. 노화와 건강약화에 따른 신체·정신적 능력 장애와 만성질환을 들 수 있다.

특히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등으로 인한 노인성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신체적 기능 저하와 더불어 심리적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게 된다. 또 각종 장애로 인하여 사회관계와 사회참여가 서서히 줄어들어 점차 고립감에 젖어들게 된다.

둘째는 고독이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타 연령대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고독이 될 수 있다. 마음을 나눌 친족들은 세상에 없고, 낯선 사람들과는 쉽게 마음이 통하지 않으며 가족이나 자녀들은 무시하거나 별 볼일 없는 이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 배우자의 상실로 홀로 된 노인들이 자살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지리적·사회적·정서적으로 고립된 노인일수록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는 경제적 문제이다. 직업역할의 상실은 경제적 상실을 비롯해 자기존중감, 권력과 명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경제적인 궁핍으로 자살하는 노인이 전체 자살율의 10%나 된다는 통계를 감안할 경우 노인에게 경제적 궁핍이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복합적인 상태의 표출로 건강악화, 경제적 빈곤, 사회적 갈등과 정서적 소외 등으로 황혼자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황혼자살에 대한 정부·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당대 사회복지과 겸임교수〉